

# 경제사령탑에 전문가 기용… 다양성·포용성 갖춘 李 정부 진용

» 1면 ‘기재 구원철…」서 계속

과기부 등 5개 부처 차관 임명도  
내달 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 예정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위촉  
민정수석 봉욱,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지 사장이 지명됐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예산실장·2차관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봉욱  
민정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이며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했으며, 충남대 공과대학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18기를 수료해 이 대통령과 동기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역시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지명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현 두산에너지 사장으로, 행정고시 36회

로 입직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 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 ‘지금의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과 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 정책 연구위원, 질병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 19 감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정 후보자의 브리핑을 듣고 안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기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정

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이번 인선으로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내달 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봉하재단 사무국장, 경남지사 등을 지냈고, 저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전성환 신임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운동과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겸손하고 온화해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발탁 배경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당심 공략 나선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 박찬대 “추석 전 검찰개혁”, 정청래 “개혁 위한 강력 투쟁”

나란히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찾아  
박찬대 “李 정부 성공 확실히 뒷받침”  
정청래 “내란과 전쟁… 공격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9일 친명(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혁신회의)’를 나란히 찾아 오는 9월 추석 전후 검찰개혁을 제각각 공약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더민주혁신회의의 전국대회를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박찬대 의원은 “2025년은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를 가능하는 한해”라며 “오직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 다른 그 무엇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 지난 5년, 여러분이 보셨던 그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소코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2025 전국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응원봉 빛의 혁명, 광장의 국민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겠다”며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 특히, 검찰 개혁은 이번 9월 추석 밥상까지 확실

하게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제 그만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역시 추석 전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당선 즉시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 공천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경선을 확대해당원의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당은 원래 싸움을 하는 곳이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에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협조하겠느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싸움 없이 승리는 없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는 개혁 작업을 위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 성과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겠다”며 “통합, 안정, 협치라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대통령으로 돌리고, 당은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장서 싸우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은 내란과 전쟁 중이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시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저는 최전방 공격수로 스트라이커로 앞장서서

싸우겠다.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내는 유능한 수비수 골키퍼가 되서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겠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지우겠다”며 “3개월 안에 해지우겠다. 박 의원은 추석 밥상 때까지 한 다 했는데, 저는 추석 때 고향 갈 때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1년 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결정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도 공정 경선, 둘째도 공정한 경선, 셋째도 공정한 경선”이라며 “장난치지 못하게 하겠다. 억울한 희생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29일 이광화·김기표·김문수 의원 등을 새 공동 상임대표로 하는 3기 지도부를 출범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023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부조정실장과 강위원 전남부지사가 설립을 주도했다. 이후 강성우 민주당 의원이 2기 지도부를 맡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국정위, ‘해수부 부산이전’ 신속추진 과제 선정

사법시험 부활도 검토  
“아직 결정된 건 없어”

이재명 정부 5개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신속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무보고도 조속한 시일 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월요일(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속추진과제로 추가로 정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수부 이전 임대 청사를 물색 중이냐’는 질문에 “관련해 다음(해수부) 보고는 언제 이뤄지는지” 묻는 질문

에 “(보고) 날짜는 특정 되지 않았다”면서 “해수부가 준비되면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이행 과제다. 해수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신청사 준공 후 이전하는 방안 외에도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

무회의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만큼, 임대 등을 통한 연내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모두의 광장(이재명 정부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에 토론 과제로 올라왔는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해보겠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함께 하는 다운홀미팅’에서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실시로 인해 폐지됐던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통하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관련해선 “공약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해서 국정과제로 분류하는 등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초과 금지’ 대책 등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국정기획위 몫은 아닌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홍 기자